

전남도-도교육청, 학교무상급식비 분담 갈등

학교급식심의회, 지자체 61% 부담했던 급식비 전국 평균 47%에 의결 확정·통보했지만 도교육청 무리한 편성...도의회, 농수산위서 심의 주목

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결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무상급식 예산안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와 자치단체가 내년 학생 급식을 위해 교육청에 지원할 예산을 확정·통보했음에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4일 전남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남도는 내년도 교육청에 지원할 전남지역 학생들의 급식비로 374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반면, 도교육청은 65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전남도와 시·군 예산을 지원받아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으로 제공하는데, 전남도와 시·군 등 자치단체가 주겠다는 예산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게 도의회 설명이다.

전남도는 지난달 말 열린 '학교급식심의회'에서 내년 전남지역 2199개교 21만 9000여명에게 지급할 급식 단가를 올해(4213원)보다 400원 인상한 4613원으로 결정, 의결한 데 따라 학교급식(식판비) 관련 예산 374억(전남도 151억, 시·군 223억)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전남도 예산안보다 282억이나 많은 656억원을 전남도 등 지자체로부터 받을 것으로 편성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심의회는 전남도와 시·군이 61% 비율로 부담해온 급식비를 전국 평균 수준에 맞춰 47%(지자체)대 53%(교육청)로 조정하는 안을 의결했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전국 17개 시·도의 2025년 학교급식·친환경 식재료비 평균 지원 비율은 48%(지자체) 대 52%(교육청)다.

전남도가 급식 지원 예산 외에 친환경 식재료비도 내년 406억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점, 교육청이 자체 부담했던 급식 인건비와 운영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점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와 시·군은 그동안 교육청이 급식 인건비와 운영비를 자체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87% 비율로 학교급식비와 친환경식재료비를 부담해왔다. 올해도 전남도와 시·군 61%, 교육청 39% 비율로 학교급식·친환경 식재료비를 분담해왔다.

전남도는 이같은 급식심의회 의결 내용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한 뒤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교육청이 심의회 의결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 예산 편성을 제출하면서 도의회에 각각 다른 예산안에 제출되는 일이 빚어진 셈이다.

전남도의회는 농수산위원회에서 전남도와 시·군의 학교급식·친환경식재료비 관련 예산을 심의할 계획이라 두 개의 예산안 심의가 불가피한 형편

이다. 불성실한 협상 과정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전남도는 지난 7월부터 7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분담률에 대한 양보안(급식비 지원비율 4대 6)을 내놓았지만 교육청은 전년도 입장(급식비 지원비율 5대 5, 친환경식재료비 자치단체 전액 지원, 인건·운영비 지원)만 고수하면서 협의를 진행해 협상이 불가능했다는 게 전남도의회 분석이다.

전남 학교급식심의회는 이런 사정을 감안, 학교급식비의 경우 전남도와 시·군이 30%를 지원하고 교육청이 70%를 책임지는 것으로, 친환경식재료비 지원비의 경우 전남도와 시·군이 100% 지원하는 방식으로 분담하는 최종안을 의결했다. 두 지원사업에 포함할 전체 지원비율이 47%대 53% 수준이다.

전남도 급식단가는 전국에서 7번째로 높고 인상률은 대구(10%)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교육청은 조례에 근거한 심의회 구성·진행·의결 결과를 부정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물을 지원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하는가 하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혼선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최정훈(민주·목포4) 의원은 "두 기관이 대립하는 모습 대신,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해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24일 오후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키아기개발총합센터에서 자국 인사만 참석한 가운데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했다. 애초 한국 유족 등 한일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본 측 대표의 아스쿠니신사 참배 이력 등이 문제가 되면서 한국 정부가 행사 하루 전 전격 불참 결정을 내렸고 결국 반쪽 행사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조선인 강제동원 언급 없었다

한국 불참, 유가족 25일 사도 광산 인근서 별도 추도식 예정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 인근에서 24일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한반도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힘든 노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이키코 외무성 정무관은 '인사말'이라고 명명한 추도사에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가치를 언급한 뒤 "빛나는 (등재) 성과는 위험이 수반된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에 종사한 광산 노동자들을 비롯한 선인들의 헌신의 산물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분들을 포함한 당시 광산 노동자들이 큰 노력을 했다"며 "광산 노동자 중에는 1940년대 우리나라(일본)가 전쟁 중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이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한반도 노동자에 대해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 상황 하에서라고 해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견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終戰)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도식은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한국의 등재 동의를 얻기 위해 매년 현지에서 열기로 약속하면서 개최된 행사다.

애초 한국 정부와 유족은 이번 추도식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이쿠이나 정무관이 과거 아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는 이력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자 전날 전격적으로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이 개최한 추도식은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

일제강제동원사민모임(사민모임)은 24일 입장문에서 "이같은 굴욕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과정에서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사민모임은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구실로 일본의 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손을 들어줬다"며 "오늘의 외교적 수치와 굴욕은 윤석열 정부의 '퍼주기 외교', '막장 외교'의 처참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도식에 참석하려는 외교부 관계와 유가족은 25일 일본 현지에서 별도 추도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연합뉴스

전남도 "목포대·순천대 통합 국립대에 의과대학 설치해달라"

대통령실 등에 추천서 제출

전남도가 목포대·순천대의 통합 국립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오는 2026학년도 개학을 위해 신속히 정원 배정 절차를 추진해줄 것도 요청했다.

전남도는 24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추천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천서에서 전남도는 "올해 3월, 정부에서 대통령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을 발표하고, 전남도에 대학 선정을 요청하면서 의대설립의 길이 열렸다"면서 "정부 요청에 따라 거점 국립대인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도민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최적의 의과대학 설립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논의 끝에 지난 11월 15일 양 대학이 지역 상생·화합을 통해 미래 발전의 동력을 만들고, 정부 '1도 1국립대' 정책에 부응하는 대학교의 통합을 통한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추진'이라는 대승적 합의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대학통합 합의에 따라 정부 요청에 부응하는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추천한다"며 "2026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이 개교되도록 정부에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남도의 정부 추천에 따라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는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명의로 한국교육개발원(의평원)에 예비인증을 신청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공무원 아빠' 출산휴가 두배 늘린다

10일→20일로...배우자 미숙아 출산휴가 100일로 확대

내년부터 '공무원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이 두 배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금의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배우자가 미숙아를 출산해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출산한 공무원이 이미 현행 10일의 휴

가를 모두 사용했다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한다.

복무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통상 국무회의 의결까지 90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 규정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기의 공무원이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외국인근로자 산재 예방교육 통·번역 서비스

광주시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등 근로현장을 직접 찾아 산재 예방교육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4월 개소한 광주외국인주민 지원센터는 제조업·건설업 등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사고사례 및 안전대책 ▲폭염 및 혹한기 대비 안전대책 ▲중대재해 사례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산재 예방교육 통역과 교육 자료 번역을 지원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뭣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뭣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채권자이의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

당 회사는 2024년 11월 22일 주주전원동의로 자본의 총액 금200,000,000원을 금10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주주들의 청약을 받아 발행주식총수 20,000주 중 10,000주를 1주당 금10,000원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익일부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4년 11월 25일
주식회사 가성글로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선로 7, 101동 2002호 (부전동, 대연파크부산)
대표이사 유재성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4년 11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100,000,000원을 금 11,000,000원으로 감소하고, 발행 주식총수 10,000주 중 보통주식 8,900주를 본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1주당 10,000원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부 2024년 12월 26일까지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4년 11월 25일
구룡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280(화정동)
대표이사 김재중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